

# 이태원 '참사 아닌 사고' 표현... "정치적인 의도 없었다"

## 국가기록원이 보낸 공문

"당시 통용되는 용어 사용 했을 뿐 세월호 때도 사고→참사로 수정"

민주당 "서울 한복판 압사 희생 참사를 사고로 표현은 책임회피"

국가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을 '이태원 사고'로 분류해 생산·관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이태원 사고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 등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 2일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17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에게 관련 기록물 생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에서 30년 이상 보존가치를 가진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기록원은 ▲사고발생, 대응, 수습 등 전 과정 기록화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에 생산된 기록물 반드시 등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을 찾는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록 ▲기록물이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등을 주문했다.

특히, 기록물 등록 시 해당 단위과제 하위 단위과제카드 명에 '이태원 사고'를 포함한 단위과제카드를 신설해 기록물을 분류·편철하라고 협조를 구했다.

기록원이 공문을 발송한 2일은 이번 참사를 규정하는 명칭과 합동분향소의 명칭 등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다음 날인 10월 3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헬러인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했으나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식 명칭으로 '참사' 대신 '사고'를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엔 사고(事故)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뜻

하고 참사(慘死)는 '비참하게 죽음'이란 뜻으로 후자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다음 날 열린 지도부 공개 발언에서 모두 '참사'란 표현을 쓰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했다.

더욱이 인명 피해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경찰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연이었던 사실도 공개되며 정부와 방재당국의 사전 예방과 대응 미흡으로 인한 '참사'라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측은 공문을 보낸 당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매뉴얼이나 지침에 따라 (이태원 사고라고)한 것은 아니고 그 시점에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잘 남기자는 취지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둔 것은 아니었다"며 "(추후에) 명칭이 바뀌면 바뀐 형태로 다루기 때문에

추가 공문이 나가든가 변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박근혜 정부는 사고와 참사라는 용어를 섞어 사용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서 '세월호 사고'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건기록물 301건, 철기록물 74건이 검색되는 데 반해, '세월호 참사'로 검색할 경우 건기록물 2645건, 철기록물 482건이 검색된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관계자는 "제가 기억하기론 (참사) 초기엔 사고로 나왔던 것 같은데 나중에 국정조사와 4·16세월호참사특위, 사회적 참사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바뀌었던 것 같다"며 "(이태원 참사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변화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도 통화에서 "결국은 인재이고 참사다.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를 당한 희생인데 정부 차원에서 지방 정부에 참사를 사고로 표현하는 것,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하는 것, 근조와 추모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내용들이라서 옳지 못하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수립을 위한 토론회

토론주제

#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 체계

**LIVE** 유튜브 생중계(채널: 고용노동부)

\*자유롭게 현장 참여도 가능합니다.



일시 2022.11.10 (목) 14:00~17:00

장소 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

1부 | 인사말씀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2부 | 발제

1. 로벤스 보고서의 함의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전형배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산업안전보건법·정책 혁신방안

정진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3부 | 패널토론·질의응답

좌장: 강성규 | 가천대 보건대학원장  
경사노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오순영 | 동덕여대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전공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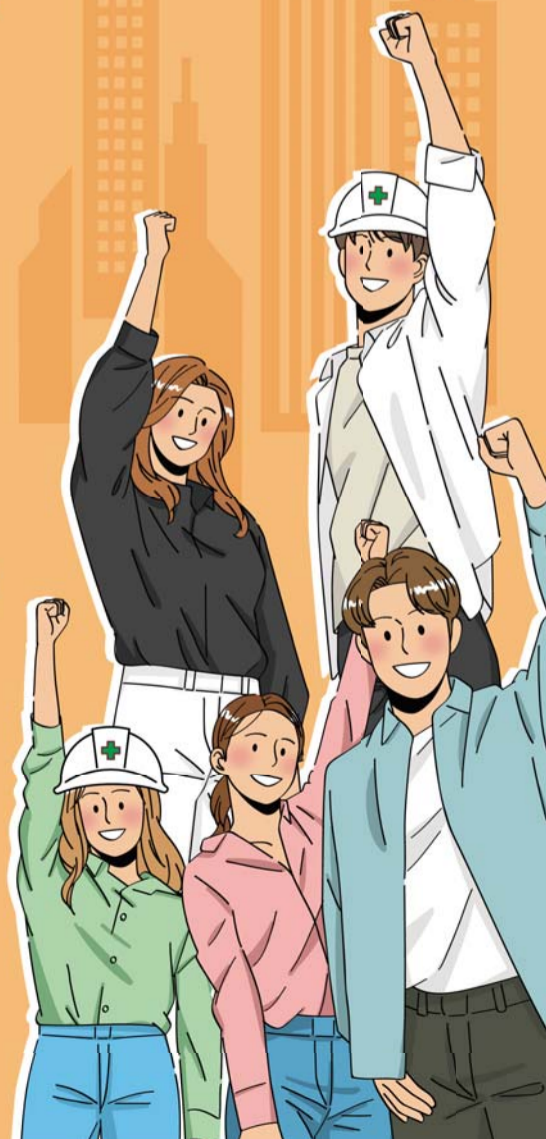
김재형 | 숭실대 스마트산업안전공학과 교수

김동하 | 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이득호 | 한국노총 전국산업안전노동조합 사무국장

양옥석 |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직무대행



## 여의도에 65층 아파트 건립 한강-도시 수변단지로 조성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최고 65층으로 재건축되고, 주변은 문화공원으로 꾸며진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우여곡절 끝에 재건축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그간 정체됐던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7일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10개월 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십 차례의 토론회와 계획 조정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상화 2500세대로 문화·상업 기능 도입 주변에 '그레이트 선셋 한강' 계획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최대 65층 2500세대 규모로 '여의도 국제금융 도시' 위상에 걸맞는 대표단지이자 '한강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수변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문화, 전시,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다.

여의도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24시간 활력 넘치는 보행일상권을 조성하고, 업무·주거시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복합용도를 도입한다.

한강변과 여의대방로 저층부에 문화·전시·상업·커뮤니티·창업·업무 등 다양한 복합기능 도입을 전제로 용적률

을 3종주거(300%)에서 준주거(400%)로 상향한다.

공공기여분을 활용해 한강변 문화공원도 조성한다.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이 어우러지고,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인 '그레이트 선셋 한강' 대표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원효대교 진입램프와 차도로 인해 단지와 한강공원이 단절됐지만, 문화공원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입체보행교도 신설한다.보도 폭이 1m 남짓으로 비좁고 어두워 걷기 불편했던 여의대방로는 보도 폭을 10m로 대폭 넓히고, 가로를 따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는 등 활력있는 상업상가로 탈바꿈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최고 65층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여의도 일대가 한강변 대표 수변도시로 재탄생한다는 점이다.

기본구상에서는 인접한 63빌딩(250m) 및 파크원(333m)과 조화될 수 있도록 200m 높이 범위 내(최고 60층~65층)에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기본구상대로 65층이 추진된다면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간 시범아파트 재건축이 부침을 겪으며 장기간 표류해 왔으나, 선제적인 규제 완화와 절차간소화를 통해 한강변 주거단지 재건축의 선도 모델로 부상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